

#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2008년 2월 29일(금)

26th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 지방본부대의원대회 22일부터 27일까지 열려

지재식 위원장 “비영업부서 상품판매·강제명예퇴직 등 잘못된 경영 뿌리 뽑을 것”



2008년도 KT노동조합 지방본부대의원대회가 지난 2월 22일 전북지방본부를 시작으로 26일, 27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쳤다.

지재식위원장은 지방본부대의원대회 격려사를 통해 “2008년은 정치, 경제, 노동 등의 정세가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며 통신산업 전반의 대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가 매출목표를 공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칫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강제명예퇴직 등의 잘못된 경영이 되살아 날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철저히 감시하고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함께 대의원이 감시와 제보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각 지방본부는 △2007년 활동사항 보고 △2008년 주요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2007년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 및 결산을 진행했다.

이후 기타토론 및 건의사항으로 나온 공통적인 의견은 △성과급 지급 확대 △급상·통근비 현실화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동계 휴가보조비 지급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의 토론 및 건의 등이 있었다.

아울러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전국 12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와 2008년 사업방향을 주제로 설명하고 대의원들과 기타 토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사업과 고충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지재식위원장의 지방본부대의원대회 격려사 전문이다.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조합이 완성을 향한 새출발을 선언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민영화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의 개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정부의 개입과 지시에 따라 일회일비하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책임지는 집행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직 진행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노사신뢰를 쌓기 위해 노사대토론회도 개최했으며 교섭방식도 과거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8대·9대 집행부가 만들어온 노사관계의 질을 한단계 더 도약시켜야 합니다. 즉 참여와 결정 그리고 집행까지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경영참여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서두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만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다면 KT의 노사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영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대의원동지여러분!

2008년은 정치, 경제, 노동 등의 정세가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우선, 기업중심의 정책을 공언하고 있는 신정부가 출범했고 노동계는 자본의 자유를 무한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필수업무유지외의무가 시행됩니다. 입법취지

는 노동쟁의 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시켰다는 것인데 문제는 필수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해 사실상 쟁의 행위 자체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신산업 전반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SK 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IPTV 상용서비스, VoIP, 역무통합 등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융합과 구조개편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면밀히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회사가 13조원의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공격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출혈경쟁, 허수경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비영업부서 상품판매와 명예퇴직 강요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잘못된 경영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반드시 뿌리 뽑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생활하는 대의원여러분의 감시와 제보가 절실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의원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십시오. 올해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의원 여러분의 단결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힘있는 노동조합은 위원장이나 집행부만의 노력뿐 아니라 바로 대의원여러분의 활동과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장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의원여러분의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참석하신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는 3월 건강한 모습으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결의로 빛나는 노동조합의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 2008년 성과급(효도휴가비 포함) 지급계획(확정)

2008년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2.13)되어 다시 알려드립니다.

#### 1. 관 련

가. 단체협약 제88조 (2007.11.12)  
나. 성과급 지급기준 합의를 (2007.8.30)  
다. 2004년 단체교섭 합의서 (2004.8.6)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성과급 80% 별도가산”

#### 2. 지급계획 및 일시

\* 2008년 연간지급 확정율 : 478.5% (차등율: -45%~+80%)

• 근거: 2007년 매출성장률 1%(8.5%) + 성과영업이익율 16%(470%) 적용

#### • 비교

- 2007년도 CEO종합득점(85.43)을 기준으로 기존산식에 적용 시 462.5%(기존산식)참고 연간지급율 = 350 + (CEO종합득점 [85] - 70) × 7.5%

- 2007년 노/사 개선합의 이전과 비교 시 16% 증가됨

\* 성과급 지급률 = 수익성지급율 + 성장성지급율  
① 수익성지급율 (성과용 이익률 13% 이상 시 산식) = 440% + (성과용 영업이익률 - 13) × 10%  
② 성장성지급율 = 매출성장률 1% 성장 당 8.5% 적용

구분	효도휴가비	성과급	차등율
2월	100% (2/4)	50%	미 차등
3월		128.5%	-25% ~ +45% (연봉·호봉제 동일)
6월		100%	미 차등
7월		임금보전 50%	
8월		100%	-20% ~ +35% (연봉·호봉제 동일)
9월	100% (9/11)		
11월		100%	미 차등
12월		임금보전 50%	

#### 3. 지급계좌

가. 효도휴가비: 별도계좌 (급식통근비 계좌)  
나. 성과급: 급여계좌

KT정기주주총회  
남중수 사장  
재선임 등 7건 처리



KT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남중수 현 사장의 재선임을 비롯해 제26기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선임, 경영계약서 승인, 임원퇴직금지규정 일부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의 74.9%의 출석으로 특별결의까지의 결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갖추었다. 남중수 사장은 인사말에서 “2008년도는 고객관점의 전환, 네트워크 기반의 All-IP화, 윈도우 확대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광고, 커머스 등을 결합하여 텔레콤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2008년은 규제환경 완화 및 다져진 성장기반에 기초해 본격적인 성장을 가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로부터 단독 추천돼 재선임됐으며 윤종록 성장사업부부장, 서정수 기획부부장인 사외이사로 연임하게 됐다. 또한 오규택 한국채권연구원장이 사외이사가 되는 감사위원이 됐고 고정석 일신창업투자 사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 KT그룹 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회의

KT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0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집행위원회, 상설기구회를 논의하고 집행위원회와 자문위원을 확정했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집행위원장 류춘용(KT노동조합 조직처장) △간사 박정웅(IT연맹 정책국장) △총무 박재현(KT과워털노동조합 부위원장) △조직담당은 백관기(KT노동조합 쟁의국장) · 박정수(굿모닝에프노동조합 사무국장) △정책기획담당 윤병호(KTF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주형(KT네트웍스노동조합 사무처장) △교육선전담당 이종석(KT링크스노동조합 사무처장) · 박재범(KTF노동조합 조직국장) △자문위원 조형일(IT정책연구소 소장)

## 채신공제조합 파산업무 관련 홈페이지 개설안내

채신공제조합 파산업무 관련 홈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개설 되었으니 배당금, 지급금액,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chegong.or.kr>

#### 파산채권 배당금 확인방법 단계

##### 1단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 2단계

본인인증



##### 3단계

배당금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어떻게 되나

# 방송통신위원회 “2실-3국-7관-34개과”

## 각종 융합·결합서비스에 대한 발빠른 대처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인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직급별 수송인원에 대해 최종 합의함에 따라, 방통위 구성은 총 479 명으로 구체화됐다.

행정부와 합의한 직제에 따른 인사는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직제령안이 의결되고 인사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임명되어야 하나, 현행 유행한 장관·조찬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통위 소속 직원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원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 정원은 479명(사무처 474명+위원 5명)으로, 방송위에서 164명이 정정부에서 310명이 가게 된다. 정정부의 경우 ▲3급이상 고위공무원단이 9명 ▲3·4급(부이사관) 3명 ▲4급(과장) 15명 ▲4·5급 21명 ▲5급 78명 ▲6급 122명 ▲7급 22명 ▲기능직 40명 ▲기타 1명으로 총 310명이 방통위로 이직한다. 방통위의 경우 ▲3급이상 고위공무원단이 4명 ▲3·4급 5명 ▲4급 11명 ▲4·5급14명 ▲5급 61명 ▲6급 48명 ▲7급 13명 ▲기능직 8명이 간다.

고위공무원단은 대변인과 감사팀,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네트워크국 등을 맡게되고, 3·4급과 4급은 34개과의 과장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원안은 방통위 출범시 특별채용되는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즉 164명을 초과하는 직원이 방통위 근무를 희망할 경우 직제령 부칙에 따라 그 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교육이나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정원을 관리하게 된다.

이에앞서 행자부와 양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를 '2실-3국-7관-34개과'로 둘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방통위 지역사무소는 현 방송위 체계로 운영되며, 소속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소를 두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인사위, 공경위, 금감위, 고충처리위, 형소년위, 청렴위 등 6개 위원회의 직급별 정원 평균을 기준으로 조정됐다. 또한 이번 조정에서 방송위 52명(공통조정 18명, 사업인력조정 1명, 심의위 33명)과 정정부 54명(소속 기관 파견 23명 포함)이 감축됐다.

과별 주요 직무			과별 주요 직무		
실국	과명	주요직무	실국	과명	주요직무
대변인		홍보, 언론브리핑 등	방송정책국	편성정책과	편성비용 고시 및 편성비용 준수 감독, 애니메이션 편성 등
	감사팀	위원회, 소속기관, 산하기관 감사 등		평가분석과	방송평가, 우수프로그램 선정 등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임용, 교육, 징계, 문서, 복무, 물품, 청사 등	방송정책기획과	방송정책 총괄, 공영방송정책, 수신료, 소유경영정책 등	
	창의혁신담당관	국회 등 대외업무, 성과 관리, 보수제도 및 복지 후생 등	지상파방송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인허가 등 행위규제	
	기획재정담당관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조직 및 정원 관리, 예산 회계 등	뉴미디어과	SD, 위성, 중계유선, DVD, 웹캐스팅, VOD의 인허가 등 행위규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 법령 심사, 소송, 공영방송 및 산하단체 임원 선임	채널사용방송과	PP 승인등록 등 행위규제	
	국제협력기획 담당관	국제협력, 남북교류, 통상정책 등	지역방송팀	지역방송발전 정책수립 및 시행 등	
	국제기구담당관	국제협력 체결, 국제기구 운영 및 협력 등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정책 총괄, 통신업무 및 통신사업 분류 제도 등
	의안조정팀	위원회 회의 운영 등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시장 시장화정 및 경쟁상황 평가 등
정보전략팀	정보화, 사무자동화, 홈페이지 구축 등	통신이용제도과		이동전화 단말기 정책, 무선통신 정책 등	
정책총괄과	융합에 따른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중장기 기본계획 등	통신지원정책과		통신지원 관리 및 활용 통신비밀 보호 등	
방송통신 융합 정책실	융합정책과	IPTV 등 융합 서비스 정책, IPTV인허가, 융합 전략 수립 등	이용자 네트워크국	네트워크기획과	방송통신망 안정성 및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콘텐츠 진흥, 인력양성, 외주제작,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등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 위치정보사업제 인허가 등
	기금정책과	기금 운용, 기금 평가, 기금 회계, 기금 징수 등		네트워크유리팀	불건전성 유동 방지대책,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등
	기술정책팀	기술 진흥정책, 기술 표준화, 관련기술 개발 등		조사기획총괄과	방송통신시장 조사, 불공정행위 방지등
	전파 기획팀	전파진흥, 전파사용료 정책, 주파수 할당정책등		시정조사과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전파감리정책과	무선국 검사, 정보기기 인증, 전파감시, 감청살비 인가 등		시청자권익증진과	시청자불만처리, 시청자 복지증진 등
	방송위성기술과	방송국 주파수 지정, 방송 표준방식 등		통신이용자보호과	통신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 등
	주파수정책과	주파수 및 전파자원이용,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등		심결지원팀	방송통신사업자 불공정경쟁 관련 안건 심사보고서 검토 등
	방송운영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선거방송심의와, 방송광고 정책 등		방송환경개선팀	미디어중독 예방, 미디어 교육 활성화 등
	디지털전환과	방송의 디지털 전환,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권보장 등		지역사무소	현 방송위원회 체계로 운영

##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내정

방송통신계의 이목이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전 곁립연구소 회장으로 쏠리고 있다.

새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부의 통신기능과 방송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조직직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시대 대비한 공영방송의 재 규정 및 지상파방송의 민영화, 신문방송 경영, IPTV와 케이블TV의 법제 정비 등 업계의 당면 난제들을 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최 내정자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방송계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신 및 방송계에서는

최 내정자가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보다 강하고 교섭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최 내정자는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6인회’의 멤버로 활약하며 대선캠프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최 내정자가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신문방송 경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은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종합) PP, 보도전문PP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대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33%, IPTV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일반 방송채널사업

자(PP)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다.

최 내정자는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바 있다. 일부에선 최 내정자가 전문가형 위원장에는 못미친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방송분야의 정책을 다루던 방송위원회와 달리 방송통신위는 방송과 통신을 모두 관장하는데 전문성에 함께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없지 않다는 시각이다.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이 대체적으로 통신계 인사들로 꾸려졌다는 점은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 ‘과감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방통위가 위상과 독립성을 지켜낼 지의 여부도 향후 최시중 위원장의 평가 잣대가 될 전망이다.

## 방통비서관실 윤곽… 방통비서관은 중앙대 양유석 교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방송통신비서관에 양유석 중앙대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철중 전 정보통신부 국장(2급), 이상진 전 정보통신부 팀장(3급), 이재준 전 문화의원실 비서관(4급), 장 훈 전 신영국 의원실 보좌관(4급) 등을 방송통신비서관실에 인사발령했다.

청와대 광속중 국정기획수석 아래에 만들어진 방송통신비서관실은 새로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통신정책 ▲

방송정책 ▲방송통신융합정책 ▲인터넷 정책 등을 총괄하게 된다.

양유석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워싱턴대학에서 경영학석사, 텍사스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위원 및 경영전략실장으로 재직했으며 한국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및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황철중 국장은 지난 99년 '한국의 통신법과 정책의 이해'라는 책을 펴 내 통신규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시사점을 던진 바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을 거쳐 최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파견 국장으로 일해 왔다.

이상진 팀장은 소프트웨어진흥과장, 미래정보전략본부 기획총괄팀장 등을 거쳐 정정부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에 파견돼 일해 왔다.

## IPTV법 시행령 마련 어떻게 되고 있나

###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IPTV 시행령’ 마찰망 동등접근권·콘텐츠 접근 등 시각차 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대한 시행령이 망동등접근권·콘텐츠 접근 등에 대한 방송계와 통신계의 입장차가 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를 잡은 후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망 동등 접근' 등 주요 사안 이견

양 진영간 가장 큰 대립을 보이는 것은 '망 동등접근권'이다. 방송위와 정정부 관계자는 2월 들어 모두 다섯 차례 시행령 제정을 위해 만났지만 망 동등 접근과 콘텐츠 동등 접근 문제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IPTV 모범'은 망 동등 접근과 관련 필수 전기통신설비의 요청에 대해 설비부족, 영업비밀보호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며 상징적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나 대가 산정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33조의5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하는 입장이다. 산정기준에 따르면(6조)

구축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와 2004년 이후 구축하는 광케이블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빠져 있다. 이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를 보장해 주기 위한 장치이다.

이와 달리 방송위는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범위,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부당한 차별과 제공 방법·절차, 전기통신설비 이용 대가 산정원칙 등을 모두 6개 조항에 걸쳐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설비 제공 거절사유와 관련하여도 설비를 제공해 업무장애가 있거나 기술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게 해두었다.

#### 콘텐츠 접근 기준도 마찰

콘텐츠 접근에 대해서도 두 진영간 입장차가 확연하다. IPTV법은 콘텐츠를 공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는 방송위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고, 종합편성·협소필·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나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는 신고나

등록·승인절차 없이도 콘텐츠 사업자로 포함시키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분야별로 시청 점유율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실시간 프로그램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1/20 이상이 송출하는 PP의 실시간 프로그램 ▲접근이 제한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콘텐츠 등을 고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입장차

시장지배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등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에 대해서도 두 진영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IPTV 모범'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회계분리를 통해 전이를 방지하자는 입장이며 방송위원회는 회계분리와 함께 영국의 BT나 호주 텔스트라처럼 사업부문 분리(사업자 내부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인력·자산·회계분리 등을 통해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해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문단은 정보통신부

###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도약시켰다”

#### 정정부 산하기관 '새 동지' 로 이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부 소관 법인(이하 산하기관)들도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으로 새 동지를 찾아 떠난다.

정정부에 따르면 정부 조직법 전부 개정안, 방통위 설립·운영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능·업무에 따라 나뉠 예산에 맞춰 산하기관들 소속도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행안부로 소속을 옮기되 방통위와 지경부 지원 기능·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기능·업무·예산비중이 88%에 달하는 방통위에 소속을 두되 행안부 일부 업무를 지원할 전망이다. 1조원대 정보화혁신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진

정통신부 창설 14년만에 '방송통신위'를 중심으로 해체된 정보통신부는 29일 유행한 장관의 이임식을 끝으로 사실상 문단을 내렸다.

유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정보통신부라는 이름과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 자리에기에 더욱 가슴이 저리다"며 "무엇보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과

여러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94년 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열망을 모아 정 정부가 출범했고 길지 않은 기간에 정 정부는 세계가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며 "지난 10여년간 저와 함께 땀 흘리며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정 정부는 28일 인사위원회와 협의 거쳐 소속 직원들중 313명을 방송통신위, 106명을 지식경제부, 53명을 행정안전부에 각각 분산 배치했다.

정 정부는 28일 인사위원회와 협의 거쳐 소속 직원들중 313명을 방송통신위, 106명을 지식경제부, 53명을 행정안전부에 각각 분산 배치했다.

정 정부는 28일 인사위원회와 협의 거쳐 소속 직원들중 313명을 방송통신위, 106명을 지식경제부, 53명을 행정안전부에 각각 분산 배치했다.

정 정부는 28일 인사위원회와 협의 거쳐 소속 직원들중 313명을 방송통신위, 106명을 지식경제부, 53명을 행정안전부에 각각 분산 배치했다.

정 정부는 28일 인사위원회와 협의 거쳐 소속 직원들중 313명을 방송통신위, 106명을 지식경제부, 53명을 행정안전부에 각각 분산 배치했다.

# 중앙상무집행위원·본사지부장 태안 자원봉사

KT노동조합 지재식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무집행위원과 본사지방본부위원장 및 본사지부장 등 35명은 2월 19일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자원봉사에 나섰다.



지재식위원장은 "뉴스를 통해서 해 기름유출 사고를 보면서 찾아오지 못한 것이 죄를 짓는 마음이였다"며 "오늘 하루라도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 무거운 마음을 씻고 가자"고 말했다. 중앙상무집행위원과 본사지방본부 지부장들은 이규규 태안지부장의 안내로 찾아간 개목마을 바닷가에서 바위 틈새의 기름을 닦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지재식위원장은 태안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피해복구와 지원에 여념이 없는 태안지부 조합원의 노고를 위로하며 조속히 원상회복되길 기원했다. 태안지부는 사고 현지를 찾아온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직후부터 휴일도 따로 없이 일하고 있다.

# 태안 봉사활동기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에 솔선수범

기술지원본부 지부장 노일철

우리가 태안 앞바다에 도착한 날은 그나마 추위가 시들해졌을 때였다. 난 작년 12월 7일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후 2년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다. 물론 두 번 모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동조합에서 중앙간부와 본사지방본부 지부장들이 함께한 유익한 봉사활동이었다.



맨 처음 태안에 도착해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는 정말 바닷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때가 많이 있었고, 악취 또한 대단했었다. 요즘 방송에서 기름유출 피해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봉사자들과 태안군민들이 방송이 되고 있다. 우리가 당겨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매일 같이 바다로 나가 방제 작업을 하는 피해 군민들은 그럴 만 하다고 새삼 느끼게 된다.

던 올해 초와는 전혀 다른 바다였다. 물론 바위 틈 사이로 깊이 박혀 있던 타르 덩어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처음과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가 싶다.

고향 후배 중 한 명이 이번 3월에 서천 바다에 김공장을 차린다고 한다. 기름유출 건으로 모두가 떠나가는 마당에 김 공장을 왜 하느냐고 물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육지의 가까운 곳에는 피해가 심하지만 먼 바다쪽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이 모든 국민들이 서해바다에서 나오는 어패류 및 해산물들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것이 서해바다를 살리는 것이라 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가게 된다. 바위 틈에 묻어있는 타르 덩어리 하나하나를 정말 성심껏 닦아 내듯 조합원 한명 한명을 위해 우리 조합간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지부대회는 조합원 축제의 날이죠”

## 남부산지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치자



2008년 부산지방본부 남부산지부 정기지부대회가 지난 12일, 1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임재식 남부산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매년 치르는 대회마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노동강도가 늘어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의원 투표를 겸해 소속지부를 찾는 정운모 부산지방본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친기업, 친재벌 정책과 더불어 회사의 공격적인 경영 또한, 앞으로의 노동조건과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24일 개최됐던 제43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 서인천지부, 지부대회와 함께 대보름 척사대회



서부산지방본부 서인천지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오전 8시 반부터 조합원들이 속속 지부장을 찾아와 지부행사를 축하했다.

김윤철 서인천지부장은 “어느덧 이 자리에서 지부대회를 치르는 것도 벌써 여섯 번째”라고 대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민노당의 참패와 분열」 경제적으로는 「물가인상」 등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어려운 현 실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노사갈등을 없애고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노사 합의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 선출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을 밝히며 “잘못 선택된 대의원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반면에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진정한 대의원도 있으니 내직장 내일터를 지키는데 일치단결된 강한 대의원을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성원보고 △회사통과 △2007년 지부활동보고 △건의사항 및 기타토의를 진행하고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대의원 투표가 시작되었다.

한편, 서인천지부에서는 지부행사와 함께 ‘대보름 척사대회’를 열고 지부 조합원들의 단결과 율향의 사업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서인천지부 전체 조합원 90여 명이 참여하여 떡담을 나누고 율향이를 하면서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훈훈한 시간을 함께했다.

예전 어른들이야 ‘척사대회’가 익숙한 말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참 생소한 단어다. 우리나라의 옛 사람들은 설을 앞두고 하여 겨우내 율향이를 즐겼다.

율향이는 한자로 척사(擲柶) 또는 사희(細戲)라고 한다. 율은 과거 우리 농경사회에서 농사나 신수를 점치는 예언적 의미로 변용되기도 했었다. 사람의 길흉을 1년 단위로 예언해 사람들의 삶에 재미를 준 것처럼 서인천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부행사를 치르면서 즐거운 하루가 됐을 것이다.

## IT연맹, 확대간부 수련회

정연한 사업계획 의지 밝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 KT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맹 산하 단위노조 간부들은 IT연맹의 2007년 사업을 평가하고 2008년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셀러리조트에서 제1차 IT연맹 확대간부 수련회를 열었다.

확대간부 수련회 일소식에서 IT연맹 박홍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확대간부 수련회를 통해 간부들의 고견을 청정하겠다고 말했다.

첫날 열린 확대간부 수련회에는 KT노동조합 지재식위원장을 비롯한 각 단위노조의 위원장 외 조합간부들이 모여 정치 정세와 경제 정세로 나누어 교육을 받았다. 또한, IT연맹이 처음 시도한 각 단위 노동조합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발표는 단위노조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둘째 날인 1일 오전에는 양평에 있는 장애우시설 ‘지계의 집’에서 청소 및 목욕 봉사 등을 했으며 각 단위노조에서 모은 성금으로 대형 세탁기 2대와 세제 187포를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규약·규정 개정 전담반 도고수련관에서 활동

규약·규정 개정 전담반은 오는 3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18일부터 21일까지 총남 도고수련관에서 규약·규정 검토작업을 실시했다.

지방본부에서 보고된 지방상징과 중앙상징으로 구성된 전담반에서는 규약·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전담반에서 검토된 안들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전국대의원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19일(화) 태안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수련관에 잠시 들른 지재식위원장은 규약·규정 개정에서 있어서 조직의 변화에 발맞춰 현실성 있는 규약·규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론을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사회적 책임, 기업 편한 데로 이해하는 경향

### 삶의 질은 없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만 관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들어 중요시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노동자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인데 반해, 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업은 CSR을 ‘기업의 이미지 개선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18일 개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임운택 계명대 교수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발표문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 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 미치는 것은 기업

임운택 교수는 이날 전국의 노동자 1100명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기업 활동에서 중요시하는 요소는 ‘이윤의 극대화’(3.9점)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4.3점)과 ‘사회적 책임수행’(4.1점)’이라고 밝혔다.

CSR의 중요성은 노동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자리 제공, 고용보호, 작업환경 개선 등 자신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곳으로 전체 응답자의 45%가 기업을 꼽은 것은 이를 보

여준다. 정부라는 응답은 33%, 노동조합은 10.2%였다.

비록 노동조합은 기업의 영향력에 비해 4분의 1수준에 불과했지만 임 교수는 “사업장 규모가 증가할수록 노동조합 선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노조에 가입한 응답자가 노조를 선택한 비율은 29.2%로 비노조원보다 3배 정도 높다”고 덧붙였다. 노조 경험의 여부가 자신의 삶의 질에 노동조합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

CSR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노동권 보호 및 차별금지’였다. 30.2%가 이 항목을 꼽았다. ‘경제적 가치의 생성과 분배’는 28.7%, ‘기업윤리경영과 반부패 활동’은 20.6%였다.

또 노동부문의 가장 중요한 CSR 활동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55.9%)이라고 대답했다.

2위는 응답자의 50.8%가 선택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고, 성·연령·노동시장(정규/비정규 노동)의 지위에 따른 차별해소가 38.4%로 그 뒤를 이었다. 전전한 노사관계의 유지와 개선도 34.4%였다.

## 그런데 그 기업은 지금?... “기업이 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않더라”

나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이지만, 기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기업이 쥐고 있는 힘을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쓰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대다수였다.

응답자의 52.8%는 “기업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크다”는 응답은 47.2%였다. 정규직은 긍정적 평가가 50.7%로 비정규직 보다 6%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들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45.1%로 “만족스럽다”는 의견(9.1%)에 비해 5배가량 높았다.

## 기업은 CSR 활동을 이미지 개선용으로 인식

우리 기업들이 CSR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을 보면 이 같은 조사결과와 이치를 짐작할 수 있다.

권순원 교수가 2006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조사에 응한 40개 기업을 놓고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CSR 추진과 실행을 담당하는 조직 내 부서를 두고 있는 등 “CSR에 대한 인식의 일반적 경향을 매우 적극적으로”이었다.

문제는 우리 기업이 생각하는 CSR의 방향이다. 조사 결과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CSR의 활동 영역은 ‘기업 거래의 투명성 및 윤리적 행동’이었다.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CSR의 활동영역과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

또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리 인정’ 문제는 CSR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권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CSR과 노동문제를 개별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의 반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CSR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 1순위가 “기업의 명성 유지 및 긍정적 이미지 형성”이라는 것은 국내 기업이 생각하는 CSR에 대한 인식수준을 엿보게 한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CSR 활동을 기업의 이미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추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법적 규제 있어야 기업이 지키더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CSR 관련 국제표준인 유엔(UN)의 글로벌 컴팩트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입 수준은 낮은 수밖에 없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는 10개 기업, GRI에는 14개 기업만이 가입한 상태였다.

권 교수는 “이 두 가지 국제 표준이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실시하는 CSR 활동은 매우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또 참여연대가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 지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행 성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행 수준 및 노력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건강한 노사관계 등 법률적 요구로 제도화돼 있는 영역들이었다.

반면 △지역사회 배려 △차별 없는 직장 등의 지표는 실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법적 규제가 있어야만 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더라는 얘기다. 때문에 권 교수는 “결국 CSR-노동관련 기준의 실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준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IT연맹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 2007년 사업평가와 함께 2008년 사업의 힘찬 결의 밝혀



IT연맹은 2월 28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강당에서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07년 사업보고예결산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박홍식 IT연맹 위원장은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어제 산별전환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했다”면서 “IT연맹의 10년 후를 생각하면 짧은 임기동안이라도 IT연맹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정세속에서 이명박 정권이 소위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며 “진보진영이 분열하고 노동계의 투쟁력이 약해진 지금의 현실 속

에서 우리가 단결과 투쟁을 통해 난국을 돌파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진영욱 수석부위원장은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며 “진보진영이 단결하는데 우리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진보진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분열”이라고 말하고 “브라질 노동자들이 룰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갖은 곡절을 겪었지만 브라질의 6개 노총이 끝까지 단결했기 때문에 노동자 정권을 창출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IT연맹은 본대회에서 △2007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건 △재정방안 승인 및 규약 개정 건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결의문 채택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연맹은 사업개발 평가를 통해 KT그룹노동조합, 정보통신공공기관 노동조합, WEB산업 및 IT개발자 등 3개 권역별 조직 편성을 피해왔다며 장기적으로 이모두를 통합한 IT산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맹은 산별전환과 조직확대를 위해 가맹 조직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상의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정서적 일치와 통일성, 나아가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사업계획으로는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 기조조사 및 로드맵 구상 △조직확대 및 비정규직 조직화 △18대 총선을 통한 연맹 정치 사업 강화 △정보격차 해소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개 등을 밝혔다.

한편, 각 단위노조가 납입하는 IT연맹 의무금을 2008년과 2009년에 300원씩 인상하는 안에 대해 승인했다. 현재 IT연맹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1,800원으로 민주노총 가맹 연맹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2007년도 단체교섭 후속조치 관련 지원직 일괄 환직

■환직대상 : 1,143명 ('08.2월 중 채용예정인 순직자 가족 2명 포함)

### ■환직방법

- 직렬 부여 : 예년도 기준 적용 (현 수행직무 및 부서 기준)
- 직무 부여 : 현 직무를 지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 - 필요시 직무전환 교육을 통해 대체 가능 (분기 수시인사시)
- 호봉 대응 : 예년도 환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 보수규정 개정 : 제61호 부칙 제3항 삭제

### ■환직자 인력운영

- 차기 호봉승급 : 원 호봉승급일
- 승진 : 현행유지 (근속승진 : 6급재직기간 10년이상, 신규6급직원 : 5년)

### ■시행시기 : '08.3.1일자

### 세부 직렬부여 기준

소속	부서	부여 직렬		
본사	지원부문	물류센터	사무	
	자산운용센터	회계센터		
사업부서	마케팅부문	기업고객지원본부	사무	
	고객센터	국제전화국		
	고객신용센터			
	IT본부	미래기술연구소		
지사	솔루션지원센터	국제통신센터	기술	
	네트워크건설센터	인프라센터		
	기획부	고객컨설팅부		사무
	경영혁신팀	지점 고객관리팀		
NSC	지점 영업팀	지점 고객전담팀	기술	
	기획부 기술지원팀	지점 고객서비스팀		
	지점 고객서비스팀	지점 고객서비스팀		
망건설센터	경영혁신팀을 제외한 직 직무분야	기술		

\* 중앙통 신운용센터 지원팀, 네트워크건설센터 지원팀 : 사무

# 2008년 지부(분회)장 및 대의원 선출결과

노동조합은 2008년도 정기지부대회 관련으로 대회 일정에 따라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의원 선출 및 보궐선거를 시행했다.

신설 · 사고지부에서는 지부장을 선출했고, 대의원은 후보자 418명 중 413명이 아래와 같이 당선됐다.

### 지부장 당선자 명단

지부장(5명)	
이정석(본사 · 네트워크건설센터지부)	박창규(전북 · 전북서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형욱(본사 · 망관제센터지부)	박정민(전남 · 보성분회)
박충범(전북 · 무주지부)	

### 대의원 당선자 명단

본사지방본부(42명)	
김성희(물류센터지부)	오철환(국제위성센터지부)
염인식(자산운용센터지부)	이상동(국제해지센터지부)
송근대(자산개발센터지부)	노일철(기술지원본부지부)
김대영(인재개발원지부)	김형미(기술지원본부지부)
이철희(IT본부지부)	문건성(네트워크건설센터지부)
김동균(IT본부지부)	박준결(기술연구소지부)
오홍택(IT본부지부)	김철욱(망관제센터지부)
김덕기(빌딩센터지부)	임병욱(망관제센터지부)
최덕용(인프라센터지부)	이상일(망관제센터지부)
김정권(솔루션지원센터지부)	윤정환(망관제센터지부)
김정현(플랫폼연구소지부)	박철호(망관제센터지부)
전병철(수도권 고객센터지부)	이대희(망관제센터지부)
우일수(부산고객센터지부)	이수기(망관제센터지부)
박광규(대구고객센터지부)	전오성(망관제센터지부)
임재홍(청정고객센터지부)	윤영근(망관제센터지부)
정병수(호남고객센터지부)	손덕진(망관제본부지부)
박선욱(국제전화국지부)	양선모(Neos센터지부)
김용관(신사업부문지부)	김창선(위성운용센터지부)
김상현(신사업부문지부)	유주홍(위성운용센터지부)
임원택(신사업부문지부)	조문정(코넷운용센터지부)
정영현(국제통신센터지부)	김종태(코넷운용센터지부)

강남지방본부(41명)	
강길원(강동지부)	김호신(명덕지부)
이종근(송파지부)	임병태(오산지부)
정병진(고덕지부)	임문태(안산지부)
박인철(가락지부)	박재경(송탄지부)
백성식(서초지부)	최동원(삼정지부)
남보희(양재지부)	김성수(광주지부)
김용준(과천지부)	조준동(하남지부)
김주인(영등지부)	민해홍(모란지부)
이희신(영등지부)	이종원(분당지부)
최운환(수서지부)	고영동(수내지부)
최종민(신사지부)	권영철(이천지부)
이기홍(반포지부)	심수영(여주지부)
윤준진(수원지부)	오재현(강남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성희(수원지부)	박광수(강동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공현배(남수원지부)	김성희(남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박영로(서원지부)	오성근(남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보식(별안지부)	김연관(남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조영준(동수원지부)	최병선(동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유연숙(동수원지부)	안병인(남부망건설센터지부)
정승환(동수원지부)	한기철(강남본부지부)
안재관(수지지부)	

강북지방본부(52명)	
이효순(광진지부)	오중현(고양지부)
이상익(동대문지부)	모정환(능곡지부)
박영숙(성수지부)	추인호(문산지부)
황현(서초지부)	박종욱(덕양지부)
최우순(전농지부)	양경웅(일산지부)
김정훈(중랑지부)	김용호(파주지부)
김갑년(행당지부)	김영근(구리지부)
박종기(중양지부)	최홍기(중양지부)
안영환(효자동지부)	장영일(남양주지부)
박종신(가좌지부)	노영환(동두천지부)
남상욱(광화문지부)	김영구(동의정부지부)
김홍구(신촌지부)	박경선(연평지부)
김동현(이천지부)	류재욱(의정부지부)
오인환(여의도지부)	이형택(전곡지부)
조성현(광안지부)	방정태(퇴계원지부)
이민기(은평지부)	최병익(포천지부)
진학수(송제지부)	김영수(서울중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홍성(강북지부)	박홍기(서울중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정석기(공릉지부)	이명희(서울북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송동기(노원지부)	김인숙(서울북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정호(도봉지부)	유재영(기북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홍성모(합정지부)	성희정(경북북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유지중(성북지부)	윤영민(경북망건설센터지부)
안덕열(합곡지부)	정재현(경량지부)
정재현(경량지부)	정병연(해화지부)
이우철(서문수원센터지부)	

서부지방본부(45명)	
김용재(구로지부)	윤덕수(시화지부)
박순일(금천지부)	서현철(시흥지부)
송홍식(동작지부)	이성우(인양지부)
한정희(관악지부)	서정규(서인양지부)
소순교(대방지부)	김낙현(교포지부)
최상남(서인천지부)	장용호(호계지부)
이광호(삼정지부)	임윤중(영등포지부)
민동원(인천공항지부)	권영준(개봉지부)
박창경(강화지부)	배준태(인천지부)
유삼열(항동지부)	김영환(민수지부)
김영환(항동지부)	김영환(부천지부)
최양식(동부천지부)	고준식(송도지부)
김현진(송도지부)	김철환(중동지부)
민해홍(모란지부)	박준홍(연수지부)
이종원(분당지부)	최영원(송탄지부)
이현수(김포지부)	한성행(서울남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성하철(광양지부)	김기숙(서울남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이근우(강서지부)	방동성(경기서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천상철(양지부)	김성수(인천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박용욱(공화지부)	이인규(인천서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임영택(동곡지부)	김용철(서부망건설센터지부)
김순호(인산지부)	이정주(서부본부지부)
배세희(동인산지부)	

부산지방본부(59명)	
이상재(동래지부)	김이순(창원지부)
이신기(금사지부)	천영주(진해지부)
김석불(남지부)	송윤택(합안지부)
전우준(금정지부)	안영환(영양지부)
박진희(김해지부)	이홍성(창녕지부)
김광철(양산지부)	김종주(미산지부)
김현중(밀양지부)	조영근(동미산지부)
신상재(통영지부)	김성재(통영지부)
김현수(사하지부)	전성효(기재지부)
김창년(중부지부)	이진은(고성지부)
이승철(영도지부)	최연수(진주지부)
조동익(북부산지부)	박권선(사천지부)
김경식(북부산지부)	권우호(삼천포지부)
남규석(포항지부)	이용학(남해지부)
김정철(거제지부)	김종철(거제지부)
윤희성(남부산지부)	박찬기(진정지부)
이남준(사당지부)	백운현(양양지부)
김의준(기장지부)	서병우(동진주지부)
정삼식(대연지부)	김익중(거창지부)
류종우(부산지부)	정성환(합천지부)
김중용(동래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문희철(부산본부지부)
이성식(수영지부)	김중용(동래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동환(영양지부)	김우정(서부산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하판용(동산지부)	최영철(동부산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강대해(남동지부)	송기운(동부산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미정(동산지부)	양경호(경남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박영택(연양지부)	김성현(진주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이영우(창원지부)	강내희(부산망건설센터지부)

대구지방본부(47명)	
강병욱(대구지부)	오종표(북포항지부)
김학성(북대구지부)	신주철(영덕지부)
하우열(칠곡지부)	최승민(울진지부)
김재호(경주지부)	김영환(경주지부)
장덕성(왜관지부)	김영연(구미지부)
김성진(서대구지부)	이금준(구미지부)
김종호(진천지부)	김영환(진천지부)
이현일(성서지부)	이광호(상주지부)
김주철(고령지부)	류재훈(안동지부)
남내원(대구지부)	김우일(서안동지부)
최영원(서문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유영선(의성지부)
정해영(월배지부)	윤희태(영주지부)
김정현(영성지부)	권중현(봉화지부)
하재훈(동대구지부)	김영준(동대구지부)
하영애(동대구지부)	주상길(예천지부)
김진규(경산지부)	박종진(대구망건설센터지부)
이병진(영천지부)	김성욱(대구본부지부)
유병태(대구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박병태(대구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변우영(수성지부)	윤정희(대구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황서영(수성지부)	박우원(동대구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박재인(상동지부)	김홍진(동대구네트워크서비스센터포항지부)
정창욱(경도지부)	이원택(안동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남태호(포항지부)	김태호(포항지부)
박인숙(포항지부)	

전남지방본부(35명)	
윤해재(광주지부)	고오석(무안지부)
김경선(동광주지부)	정 천(영암지부)
정필호(장성지부)	박진규(장흥지부)
김영철(북광주지부)	장현경(진도지부)
배상훈(광산지부)	윤수홍(하당지부)
김형원(하남지부)	김중희(순천지부)
김희운(송정지부)	백정금(순천지부)
심재환(영광지부)	최윤수(동순천분회)
박래경(나주지부)	김관인(고흥지부)
김윤섭(서광주지부)	지경재(여수지부)
한승민(화순지부)	박양규(광양지부)
김윤재(남광주지부)	김경실(여천지부)
신종민(삼무지부)	김유진(광주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이상훈(목포지부)	김애정(광주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류국상(동목포지부)	유승태(목포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신홍현(안동지부)	박상운(순천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박환식(해남지부)	김준철(전남망건설센터지부)
강희성(강진지부)	

전북지방본부(16명)	
이윤근(전주지부)	박충범(무주지부)
전부호(삼천포지부)	김영철(정읍지부)
소승수(남원지부)	고한재(김제지부)
노용환(익산지부)	이윤(부안지부)
김성수(군산지부)	김성달(고창지부)
이상배(전주지부)	강택술(전북망건설센터지부)
고효진(동전주지부)	양태모(전북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이학술(팔복지부)	전재술(전북서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충남지방본부(32명)	
정찬용(대전지부)	하태윤(천안지부)
유태건(동대전지부)	윤경식(아산지부)
박재용(영진지부)	오홍식(충성지부)
이기우(서천지부)	배재철(영양지부)
김현기(금산지부)	이강식(예산지부)
김문성(서대전지부)	한동서(서산지부)
고은(서대전지부)	이규태(연기지부)
이태규(서천지부)	홍두유(서천지부)
김태원(연무지부)	김용삼(부여지부)
편홍진(서산지부)	유호진(서천지부)
홍영' (유성지부)	오종환(보령지부)
유병희(서대전지부)	안상표(충남본부지부)
장정철(서대전지부)	최장희(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이병도(조치원지부)	김영기(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박호천(천안지부)	박찬국(충남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이선주(천안지부)	이치영(충남망건설센터지부)

충북지방본부(14명)	
이정훈(청주지부)	박재용(영동지부)
도형태(당진지부)	유병철(충주지부)
곽호근(천안지부)	삼재(김영양지부)
정광규(남청주지부)	남한우(제천지부)
차용남(서천지부)	장남진(충북망건설센터지부)
유병태(경인지부)	한미리(충북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효철(옥천지부)	연광식(충북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강원지방본부(23명)	
채수요(원주지부)	박영민(양양지부)
김기연(형성지부)	손진호(고성지부)
이현태(양양지부)	김영선(홍천지부)
최두승(평창지부)	김희민(삼척지부)
안상진(춘천지부)	김호준(태백지부)
심우승(홍천지부)	신승철(정선지부)
김성태(인제지부)	박재호(강릉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용덕(영양지부)	김용남(강릉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김승규(철원지부)	이두형(춘천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조강형(화천지부)	이혁중(강원망건설센터지부)
김남진(강릉지부)	송홍재(원주본부지부)
정영준(속초지부)	

제주지방본부(7명)	
김성호(제주본부지부)	강상수(서귀포지부)
서양지(제주본부지부)	윤재호(산포지부)
이영근(제주지부)	김경태(제주NS지부)
고영현(신제주지부)	